

# 인천광역시

## 주의 요구

### 2019년도 인천광역시 대공원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19. 9. 2.부터 9. 6일까지 (5일간) 인천광역시대공원사업소를 대상으로 2016. 12.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14건(본처분 10건, 현지처분 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초지 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 ‘인천대공원 진입로 목교설치 및 정비공사’ 등 3건에 대한 수범사례를 발굴하였다.

#### □ 감사결과 내역

구분	처분 현황(건)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신분상 조치(명)			
	계	본 처분	현지 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추징 회수	환급액	계	경징계	훈계	기관 경고
계	14	10	4	13	3	6	4	329	329	-	1	-	1	-

제 목 도시공원점용료 부과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 1. 도시공원점용료 부과 부적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의하면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에 따라 그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3조, 제5조, 제7조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에서는 점용허가대상 도시공원과 점용허가 기준, 점용허가 기간(3년 이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점용료<sup>1)</sup>는 점용허가 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 4]에 따라 도시공원 점용료 부과·징수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17년 □□공원 내 전주, 선하지<sup>2)</sup> 점용허가를 비롯하여 6건의 도시공원 내 점용을 허가 하면서 점용기간인 3년 치 점용료 총 46,499,930원을 각각 부과·징수하였다.

1) 점용료: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6~10 (점용대상에 따라 상이), 단위기준: 연액

2) 선하지: 토지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고압선 아래의 토지)

그러나, 공원점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공시지가는 매년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원 내 철탑·선하지 점용위치인 ■■■동 \*\*~\*\*번지의 토지공시지가는 2017년 171,000원이나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396,000원, 419,000원으로 2017년 대비 2배 이상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대공원사업소(○○팀)에서 2017년 일괄 부과한 6건의 도시공원 점용료를 연액으로 각각 재 산정한 결과 34,288,680원이 상승한 80,786,610원으로 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도시공원점용료는 토지공시지가가 매년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액으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인천대공원사업소(○○팀)에서는 2017년도 부과 시 3년 치 공원점용료를 일괄 부과·징수하였으며 공원점용료 34,288,680원을 적게 부과·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도시공원 내 점용시설 관리 소홀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7조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3조(점용물의 관리)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 허가내용과 같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경계측량을 요구할 수 있고, 점용허가를 한 경우 점용 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각 공원별 점용허가관리대장 토대로 전반적인 점용현황을 확인하여 누락되는 점용물 현황이 없는 지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대공원사업소(○○팀)에서는 ■■공원 내 화장실 공급을 위한 지역 난방 열 배관 관로가 매설(A=661.0m<sup>2</sup>) 되어 있었음에도 종합감사 기간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확인결과 열 배관 관로 매설에 대한 공원점용료는 매년 ◎◎구에서 현재까지 부과·징수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인천대공원사업소(○○팀)에서는 부평공원 내 매설물 등 점용현황을 파악하여 부과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열 배관 관로(A=661.0m<sup>2</sup>)가 매설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7,267,310원 상당의 공원점용료가 ◎◎구 세외수입으로 부과·징수되고 있는 등 도시공원 내 점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주의) 공원점용료 부과 시 연액으로 부과하시고, 공원 내 점용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시어 점용료 부과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권고 · 통보

제 목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및 유기동물 관리 미흡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팀)

관 계 기 관 □□과, ■■구(▷▷과)

내 용

### 1.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

2017. 12. 18. 인천대공원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는 시 ■■■과로부터 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대상지로 2개소 (□□공원, ◇◇공원(■■■공원)가 선정되었으나 2018. 1. 30. 1개소(□□공원)로 변경 결정된 후 2018. 1.31. 조성사업비(시설비) 236,000천원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였다.

### 가. 운영시간 변경에 대해

2017. 10. 12. 사업소에서는 시 ■■■과에서 시민 652명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과 관련하여 공원 산책 빈도, 반려동물 소유 여부 등 12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받았으며,

2018. 1. 29. 시 ■■■과에서는 사업소에 타 시·도(○○시)에서 놀이터를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포함하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통보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운영하도록 하였다.

2018. 1. 31. 사업소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국내사례 조사계획에 따라 2018. 2. 6. 사업소장 외 2명이 ○○시 1개소, ○○도 2개소에 대해 운영실태 [시설규모 및 시설물,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현황 및 문제점(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파악, 관리형태 및 관리원 근무 형태 파악)등] 을 파악하였다.<sup>1)</sup>

1) 2018. 2. 인천대공원 반려동물놀이터 사례조사 (○○ ㄱ공원, ○○ ㄴ공원, ○○ ㄷ공원, ○○ ㄹ공원)

2018. 6. 22.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계획(1차)에 의하면 운영 시간은 공사 준공(2018. 4. 16. ~ 2018. 6. 21. (조정, 전기)에 따라 주간(18:00) 운영을 원칙으로 공무원 1인, 기간제근로자 2인을 채용하여 2018. 7. 2. 개장하였으며,

2018. 12. 31.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계획(2차)에서는 놀이터는 1. 2. ~ 12. 31. 까지 운영하고(동절기 주말평균 100명~130명 입장, 동절기 운영 필요) 2019. 4. 1.부터는 퇴근 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09:00~20:00까지 운영하는 계획(기간제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을 수립하였다.

그런데도, 2019. 6. 5.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계획(3차)에서는 이용시간 변경을 2019. 7월 확정하여 9월부터 운영하기로 하였다가 다시 2019. 7. 11. 설문조사 결과보고 시<sup>2)</sup> 2019. 9. 운영시간 변경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놀이터 이용 시간은 운영 기관의 여건 보다는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이나 눈높이에서 최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조성 전에 운영시간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시설을 설치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무인계수시스템에 의한 대공원의 1년간(‘18. 3.~’19. 2.) 출입자 6,107,675명 중 낮시간(09:00~18:00)은 51.3%, 야간(18:00~21:00)은 48.7% <야간 중 비율 37%(18:00~19:00), 34%(19:00~20:00), 29%(20:00~21:00)> 로서 놀이터는 시민의 생활 패턴이나 주 이용시간대에 맞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공원시설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과 불편이 없도록 시설개선 및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놀이터 운영시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놀이터를 조성하였으며 개장한 후 계획을 변경하고도 일정이 약 6개월 이상 지연되었으나 감사 기간중인 2019. 9. 2. 반려동물 놀이터 연장운영계획 [(2019. 9. 10.부터 3. 1.~11. 30.(10:00

2) 이용만족도 : 84% 만족 이상 (응답자: 110명) 운영기간 변경: 설문 응답자 대다수 종료시간 연장을 원함, 운영시간 변경 시 18시 이후 무인시스템 적용 반대 (평일 일과 종료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종료시간을 연장(09:00-20:00예정) 불만족 및 개선 필요한 사항: 그늘, 화장실, 휴게시설 쓰레기통 추가 설치 등

~20:00), 12. 1.~2. 28.(10:00~17:30)] 을 수립·운영하였다.

## 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2018. 6. 22.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계획(1차)에서는 공무원 1인은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총괄, 기간제 근로자 근무관리를 하고 기간제 근로자 2인은 이용객 관리와 시설물 청소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18.12.31.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 유지를 위해 매월 2회(월요일) 소독(방역), 토양검사(◎◎◎),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 이수(동물보호시스템) 등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놀이터는 이용객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고 야간 운영을 실시하는 경우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금속 등의 오염 외에도 개와 개간의 전염병, 기생충 전파뿐만 아니라 개와 견주 간의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위생 등을 위해 사전에 충분하게 관리·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사업소에서는 2018. 7.부터 2019. 5.까지는 계획과 달리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2019. 6월부터 월 1~2회 실시), 관리자 온라인 교육은 '19. 5월부터 3회 실시, 토양검사는 실시하지 않는 등 일부 부실하게 운영하였다.<sup>3)</sup>

따라서, 놀이터의 시설이용, 안전, 보건과 관련한 이용자 준수사항 및 관리기준, 관리자 교육 등에 관한 세부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용만족도 조사 시 불만족 사항으로 조사된 “그늘, 화장실, 휴게시설 쓰레기통 추가 설치 등”과 이용객이 여름·겨울기간 중 보다 쾌적한 환경(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휴식(대기)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

### 가. 유기동물 보호조치

3) 2019. \*. \*\*. 반려동물 놀이터 토양성분 검사 의뢰(2019. \*. \*\*. ○○○ : 기생충(란) 불검출)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5조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8조, 제14조, 「○○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확대방지 조례」 6조, 제8조, 「○○구 반려동물 보호 및 확대방지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구조하여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조치를 위해 직접 동물 보호 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동물 병원 등에 보호조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동물 보호 등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5년 단위 “동물 복지계획”, 5년 단위 “반려동물 보호 및 확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나. 사업소 조치 결과

사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원 구역 내 유실·유기견이 출입되지 않도록 야간에 적절한 차단시설 설치나 주간 순찰 등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고 시민에 의해 발견되거나 신고 받은 경우 ○○구(㉠㉡)에 보호처리를 요구 등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2017. 11. 12. 사업소에서는 ◎◎구(㉢㉣)로부터 유기견 발생 민원을 이첩 받은 후 총 3회에 걸쳐 ○○구에 보호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포획틀(3회/3개) 설치 외에 포획 등 적극적인 조치는 실시하지 않아 2018. 8. 9. 자체적으로 성견 (어미개) 2두를 포획하였고 약 1년 6개월 후인 2019. 5. 23. ○○에서는 전문포획업체와 계약 후 총 10두(2019. 5. 29.: 8두, 2019. 5. 31.: 1두, 2019. 6. 7.: 1두) 를 포획하였다.

4)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제8조의 “동물의 구조 보호 및 공고” 업무 권한 위임

업무 관할 기관인 ㉠구(○○과)와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와 협의하여 남동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거나 조기에 자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시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공원 운영 및 관리기관으로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예방 활동, 계도를 위한 현수막은 2018. 9. 27. 이후 설치하고, 안내방송은 2019. 5. 24. 이후부터 실시하였으며 포획틀은 설치하지 않는 등 위험 노출 상황과 시급성에 비해 다소 소극적으로 처리하였다.

#### 다. 시 ○○과 업무처리에 대해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확대방지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시장은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18. 6. 27. 사업소로부터 유기견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으면 업무 처리 상황 및 발견 경과 등을 파악하여 ㉠구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거나 시급성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처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구에 조치를 요구하거나 경과를 파악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2018. 8. 9. 사업소에서 불가피하게 직접 포획을 하고 2019년에 ㉠구에서 3회에 걸쳐 포획을 하기 까지 시민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거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시 ◎◎과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동물보호(유기동물) 관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구(○○구 ㉠과 등)에 통보 및 사업비를 교부하는 등 유기동물의 적정 관리와 시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향후, 군·구에서 교부받은 유기견 마취총 포획비 등의 집행상황과 관할 구역 및 사업소 내 발생하는 유기견 발생 상황을 점검하여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부족한 경우 추가 지원 하거나 업무지침을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등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5)에 의한 시 단위 5년 간의 동물복지계획과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확대방지 조례」 제6조에 의한 반려동물 보호 및 확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라. ㉠구(㉠과) 업무처리

2017. 11. 14. ○○구(□□과)에서는 사업소로부터 유기동물 발생사실을 통보 받았으며 유기견 중 성견(어미개 1마리)이 있고 어린이, 어르신 등이 많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원의 장소적 특성과 유기견의 이동이 넓은 지역에서 제한 없이 자유로운 점을 감안하면 사고의 위험이 높아 빠른 시기에 포획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했다.

그런데도, 2017. 11. 14. 유기견 발생 이후 사업소에서 직접 포획한 2018.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유기견의 포획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소에서 2018. 8. 9. 포획할 때까지 포획틀 2개(1회)만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 최초 유기견이 발생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시민이 사고 위험에 노출 되었고 5차례의 사고(애완견 물림, 민원인 물림 등)가 발생하여 ◎◎◎(손해보험사)에 배상금을 신청(사고접수<sup>6)</sup>)하는 등 야생화된 유기견 보호조치 및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관리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였다.

이후, ●●구에서는 2019. 5. 20. 포획틀 설치, 2019. 5. 23. 유기견 전문포획 사업 계약 후 3회 포획사업을 하여 총 10두를 포획하였다.

5) 동물보호법 제4조 국가는 5년 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유실육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 2014.12. 농림축산식품부 5개년 계획(2015-2019), 2019.말까지 계획 수립 (2020- 2024년)

6) 201\*. \*. \*. 영조물배상공제 사고접수, 2019. \*\*\*. \*건 합의, 2019. \*. 현재 \*건 현재 진행중

## 조치할 사항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권고)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지침 마련 및 이용 시민을 위해 서비스(휴식공간 등)를 개선하기 바라며, 유기동물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 □□과장은

(권고) 시 전체적인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㉔구청장은

(통보) 유기동물로 인한 민원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직무 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시정·주의요구

### 제 목 입찰 및 계약 집행 관련 업무처리 미흡

###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

### 관 계 부 서 ㉔팀

### 내 용

#### 1. A 용역 업무처리 미흡

인천대공원사업소(㉔팀)에서는 공원 내 노후된 체육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위해 A 용역, B 용역을 실시하였다.

[표 1] \*\*\*\* 및 \*\* 용역

(단위: 원, ㎡)

계약일자	용역명	규모	용역기간	설계금액	계약금액	비고 (계약)
2017. *. **.	A 용역	A= 5,654	착수일로 부터 20일	80,852,000	71,076,900	ㄱ업체
2017. *. **.	B 용역	A=3,455.3	“	49,409,000	48,420,800	ㄴ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4호, 제6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3호 입찰에 관한 서류에 의하면 입찰공고문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등 입찰에 부치는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입찰 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을 갖춰 두도록 하고 있다

과업내용서<sup>7)</sup>는 계약문서 중 설계서의 일부로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7) 과업내용서를 시방서로 표기하였음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정리한 입찰 참고서류로서 입찰참가자에게 관한 사항은 공고문을 따라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에서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 자격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각 입찰에 관한 서류 간에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없게 유의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사업소(目目팀)에서 실제 입찰공고 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르게 실적 제한 내용이 포함된 과업내용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업소(○○팀)에서는 이를 확인·수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A 용역은 시 ◎◎에서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가 다르게 작성된 것을 사용하여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B 용역은 자체 수의계약 건적 공고하여 입찰 참가자의 혼란 초래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2. 동물원 진료장비 구매 업무처리 미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입찰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부서에서는 동물원 진료장비를 구매(초음파진단장비 등 2종)하기 위해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업체”, “동물용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지역제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정업체가 입찰 전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은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수의견적 안내 공고를 하기 위해 결재를(공고문: 공고일, 제출기간, 개찰일자)받았다면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다면 다시 변경 결재를 받아 처리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계약담당자는 결재 받은 대로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1차 공고 시는 공고일을 2차 공고 시는 공고일, 공고기간, 개찰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공고를 실시하였다.

## 3. 인천대공원 A 공사 계약 업무처리 미흡

201\*. \*. \*\*. 인천대공원사업소(○○팀) 사업담당자는 인천대공원 이용객수를 객관화하고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무인계수기 15대를 설치하는 인천대공원 ○○○○시스템 구축사업을 계획하였고, 201\*. \*\*. \*\*. 같은 팀 계약담당자는 201\*. \*\*. \*\*.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제품 규격서 및 장비 시방서” 첨부) 등 계약절차를 진행하여 201\*. \*\*. \*\*.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공사 계약 현황

(단위: 원)

공고기간	기초금액	낙찰금액	결과	계약업체	비고
201*. *. **. ~ *. **,	59,950,000	52,366,990 (87.775%)	124개사 투찰	ㄱ업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예규 제1회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제7호나목 7)에서는 계약담당자가 공사 등의 입찰·계약집행 시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 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이 없게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담당자는 예산범위 내 공사에 필요한 물품과 유사한 규격이나 사양을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내용을 “제품 규격서 및 장비 사양서”에 첨부한 상세요구 규격서 및 세부규격에 반영하고 동등 이상의 물품은 납품이 가능하도록 작성했어야 했으며, 계약담당자는 공고 전에 이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계약담당자는 세부규격서에 ○○○ camera는 “모델명 : ○○-\*\*\*\*\*”, ○○○ camera는 “모델명 ○○○-\*\*\*\*\*”로 특정 제조사가 생산·공급하는 물품의 모델번호를 그대로 표기하여 입찰공고 후 낙찰업체와 계약하였다.

그 결과, 낙찰(계약)업체로서는 세부규격서에 명시된 모델의 물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게 되었다.

#### 4. 지연배상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미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9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준공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공사: 1000분의 0.5)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표 3] 지연배상금 부과 징수 현황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계약일	준공기한	준공서류 제 출 일	준 공 검사일	계약금	지 체 상금률	지체일수	지체상금	부과일	수납일
A 공사	'16. *. **.	'16. *. **.	'16. *. **.	'17. *. **.	93,999	0.05	8	375	'17. *. **.	'17. *. **.

따라서, 인천대공원 A 공사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인 2016. \*\*. \*\*.을 지나 준공서류를 2016. \*\*. \*\*. 제출하고 2017. \*\*. \*\*.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면 지연 일수는 15일이고 지연배상금은 704,990원을 부과·징수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계약담당자는 준공기한 일부터 준공서류 제출일의 8일을 지연 일수로 계산하여 지연배상금 375,990원을 부과·징수(부족액 : 329천원)하였다.

#### 5. 선금보증서 업무 처리 미흡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고,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에게 연장 기간을 가산하여 증권·보증서**(이하, “선금보증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가 준공기한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맞게 A 공사 실시설계용역은 2017. \*\*. \*\*.이후, B 공사는 2018. \*\*. \*\*.이후 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하는 선금보증서를 받아두어 채권을 확보했어야 했다.

[표 4] 선금 지급 및 보증서 징구 현황 (단위: 천 원)

사 업 명	계약 금액	계약일	착공일	선금	준공기한		선금보증서	
					변경전	변경후	보증기간 (변경전)	보증기간 (변경후)
A 공사 실시설계용역	28,153	2017. **. **.	2017. **. **.	8,446	2017. **. **.	2017. *. **.	2017. *. **. ~2017. *. *	미징구
B공사	446,897	2017. **. **.	2017. **. **.	150,000	2017. **. **.	2018. *. **.	2017.**.**. ~2018 *. **.	미징구

그런데도, A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건의 사업에 대해 선금 158,446천 원을 지급하면서 당초 계약에 대한 선금보증서만 받고 변경 계약에 대한 선금보증서는

받지 않았다

그 결과, 각각 17일, 23일간 금전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시정] “A 공사”에 대한 준공 지연배상금 부족분 329천 원(7일분)을 부과·징수하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계약업무 수행 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직무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개선요구

제 목 인천대공원 야영장 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관리분석)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 1. 인천대공원 야영장 조성

2009. \*\*. \*\*. 시 □□과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중 아시아 청소년 챔버리 대회 유치를 위해 “인천대공원내 청소년 야영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인천대공원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통보(청소년야영장으로 계획하였으나 2010. 5. 20. 야영장<sup>1)</sup>으로 시설설계용역에 반영하고 사업 준공 후 사업소에서 관리하기로 협의)하였고 2012년 사업비 2,971백만 원(국비: 복권수익금)을 확보하여 201\*. \*\*. \*\*. 조성공사 착공<sup>2)</sup>, 201\*. \*. \*\*. 인천대공원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 2. 운영 및 관리방식에 대해

##### 가. 운영방식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3. 6. 19.)(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13. 3. 23.)(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sup>3)</sup> 제5조(개정 2012-11-19)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원가계산(적정한 비용과 수입을 반영)한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야영장 실시설계(착공: 201\*.\*\*\*, 준공: 20\*.\*\*\*), 2011.6.27.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2011.7.4. GB 관리계획(변경)

3)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④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 일반입찰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매년 위탁료<sup>4)</sup>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원수탁관리자는 공원녹지법 제40조 제1항, 제2항,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5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입장료나 공원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공유재산법 제20조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자는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재산인 야영장을 운영하는 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① 직접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여건인지 단순히 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민간 등이 사용하도록 하거나 또는 유지·관리의 성격이 큰 재산 등으로서 관리·운영에 있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산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② 향후 관리방향이냐 사용 환경 등 여건이 변화하는 경우 적정한 시기에 검토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 나. 운영관리계획

2013. 7. 24. 사업소에서는 야영장 준공 전에 타 시·도(○○공원 자연캠핑장 등 5개소)의 운영사례, 운영방식(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 위탁<sup>5)</sup>, 청소년단체 위탁, 사업소 직영)의 장·단점 등을 비교한 결과 유지관리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추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에 유리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인천대공원 야영장 운영관리 계획”(이하, “운영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4) 지방자치단체가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을 예정가격으로 작성(최고가 입찰)

5) 2013. 7. 3. 야영장 관리위탁 대행 협의(인천도시공사: 마케팅 한계로 관리위탁 참여 불가,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부터 가능(연 390백만원 운영예산 요구))

이후, 2016. \*. \*\*, 사업소에서는 ◎차 사용자 선정 시 관리위탁을 검토하기 위해 시 □□□□, ◇◇◇◇에 인천대공원 야영장 운영 대행 가능 여부를 문의 하였으나 시로부터 부적합 의견(시 □□)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공기업 혁신방안 관련 야영장은 공기업 적정 사업으로의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다.

이와 관련, 사업소에서는 ① 사용수익허가자 결정 시 약 6년간 4차에 걸친 사용자 변경과 입찰 시 유찰의 반복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② 이를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캠프문화, 분위기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시설운영 경험 등을 종합하여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3. 사용자 결정 및 변경 경과

### 가. 사용자 결정

사업소에서는 인천대공원 야영장 사용수익허가 계획을 수립, 공유재산(야영장 및 부대시설의 운영 및 관리) 사용수익 허가를 위한 입찰공고 시 사업 계획서를(조직구성 및 인력, 시설물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대책, 매점운영계획,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등) 제출하여 적격통보 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자”라 한다)를 하였다.

○차~ ○차 사용자(‘1\*. \*\*,부터 ’1\*. \*\*,.)까지 실시한 사용자 결정 전반의 과정을 파악하여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토대로 향후 개선방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소에서는 201\*. \*\*, \*\*. 사용자 결정을 위해 201\*. \*\*, \*\*. 한국자산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여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후(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특수조건 첨부<sup>6)</sup>)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인 (주) A사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201\*. \*. \*\*, 사용기간을 2년(201\*. \*\*,부터 201\*. \*\*,까지, 단 1회에 한하여 1년의

6) 사용자는 입찰 공고 사용수익허가에 따라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를 사업소에 납부하고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 사용료는 연 250,743,44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하여 201\*. \*\*. \*\*.부터 “너나들이 캠핑장”이라는 명칭의 일반 야영장을 운영하도록 하였다가 201\*. \*\*. \*\*. 사용기간을 201\*. \*\*. \*\*.까지 1년 연장 하였다.

### (1) 야영장업 등록

「관광진흥법」[시행2015.8.4.] [법률 제13127호, 2015. 2. 3., 일부개정] 제3조제1항제3호 다목에 야영장업 신설 개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기존 야영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의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신설에 따라 2015. 8. 3.까지 등록했어야 했다<sup>7)</sup>

이에 따라, 사용자는 201\*. \*\*. \*\*. □□구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 \*\*. \*\*. 반려(불허)처분을 받고 201\*. \*\*. \*\*.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반려 하자(야영장업등록주체, 일반야영장 등록 적정 여부 문제 이전<sup>9)</sup>) 201\*. \*\*. \*\*. 행정심판을 청구, 201\*. \*\*.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는 재결에 따라 등록 신청일 이후 약 9개월(201\*. \*\*. \*\*. ~201\*. \*\*. \*\*. )후인 201\*. \*\*. \*\*. 일반야영장 등록을 받았다

향후, 사용자 변경이나 공원 조성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으로 부터 별도의 인·허가,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미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기관 간 갈등 및 행정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다. □차 사용자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1\*. \*\*. \*\*.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 하고자 하면 201\*. \*\*. \*\*.이전에 공고했어야 하나 이에 1일 미달된 기간으로 입찰(공고 201\*. \*\*. \*\*. .\*\*\*, 입찰 마감 201\*. \*\*. \*\*. .\*\*\*, 개찰 201\*. \*\*. \*\*. .\*\*\*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차 사용자가 제기한 “낙찰자결정 무효 확인” 행정소송<sup>10)</sup>이 201\*. \*\*. \*\*. 판결날 때까지 ○차 사용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있는 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 \*\*. \*\*. 신규 낙찰자의 운영시기 등 검토 보고(인천대공원사업소-\*\* (201\*. \*\*. \*\*. )에 따르면 ○차 사용자의 수익사용허가 기간 만료일인 201\*. \*\*. \*\*. 이전에 □차 사용자 결정을 위해 입찰공고(사용기간 : 201\*. \*\*. \*\*. ~ 202\*. \*\*. \*\*. (5년), 낙찰자 (수탁 운영자)와 사업소 간 협의에 의하여 개시일은 조정 가능) 후 A를 낙찰자로 결정 통보하고 201\*. \*\*. \*\*.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최초 사용자의 무단 점유가 계속되어 낙찰자 결정 이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차례 협의와<sup>11)</sup>, 201\*. \*\*. \*\*. 사업시기 조정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1\*. \*\*. \*\*. “사업운영 어려움”으로 사용수익허가 신청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 라. □차 사용자 B

□차 사용자에 대한 입찰절차 후 201\*. \*\*. \*\*. 사용수익허가를 하면서 201\*. \*\*. \*\*.까지 공유재산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 미납 시 “사용허가 취소, 입찰보증금은 인천광역시로 귀속된다는 사항”을 안내하였다.

그런데도, 사용수익허가자는 통행로 야자매트 전체 교체, 다목적 광장 벤스 주변 정리 등 11개 항목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그 때까지 사용개시일의

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 신설, 시행

8) 문화관광체육부에서 2015. 5.31.까지 등록하도록 하였다가 2015. 8. 3.까지로 연장

9) 사용수익허가 연장 관련 의견(야영장이 민간의 영리적인 사업에 이용되지 않고 주민을 위한 공원시설로서 사업소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10) 201\* 구합 \*\*\*\* 낙찰자결정결정 무효 확인(각하: 피고부적격) “입찰 공고기간을 경미하게 준수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1) 201\*\*\*\*. 낙찰자는 “무단 점유자에 대한 법적 조치 (또는 자진 퇴거) 이후 야영장을 개장하고 1차년도 사용료 납부 준비 기간은 1년(추후 협의), 자금 유동에 문제가 있어 1차년도 사용료는 4분납을 요청

연장을 요구하면서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업소에서는 201\*. \*\*. \*\*.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과 201\*. \*\*. \*\*. 입찰보증금 16,100,000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다.

#### 마. ◇차 사용자 C

1차 공고(2018. \*. \*\*. ~ \*. \*\*. ), 2차 공고(\*. \*\*. ~ \*. \*\*. )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3차 공고(2018. \*. \*\*. ~ \*. \*\*. )시 당초 예정가격(285,303,430원)의 10%를 감한<sup>12)</sup> 256,773,090원으로 4차 공고(2018. \*. \*\*. ~ 2018. \*. \*\*. )시 20%를 감한 228,242,750원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2018. 8. 8. C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201\*. \*\*. \*\*. 5년간(201\*. \*\*. \*\*. 부터 202\*. \*\*. \*\*. 까지)사용하는 사용수익허가를 하였다.<sup>13)</sup>

#### -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① 야영장 사용자 변경을 위한 입찰 공고 시 새로운 사용자가 야영장을 사용·수익하는데 장애나 제한받는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할 필요가 있으며, ②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입찰 참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 - 운영실태 관리와 관련하여

①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야영장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영업수익 추이, 입장객 변동 현황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②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적정 시기에 필요한 검토, 조치(운영 방식, 시설 개선 등)를 통해 장기적으로 야영장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13) 201\*. \*\*. \*\*. 사업자등록 (캠핑장) 관광사업등록(일반야영장업)

## 4. 야영장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해

### 가. 시설 설치(사업계획서 승인) 관련

◇차 사용자 결정 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문, 201\*. \*. \*\*. 낙찰자 결정 통보 문서에 의하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격통보를 받은 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사용수익허가 신청시 세부사업계획서를 승인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에서는 기존 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및 변경 시에는 승인을, 판매·대여 물품의 품목 및 가격 변경 시에는 신고·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업소에서는 201\*. \*. \*\*.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용수익허가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승인 절차 없이 사용수익허가를 하였고<sup>14)</sup> 201\*. \*. \*\*. 사용자로 부터 “기본시설 외 고정식 그늘막, 데크, 폴세트 또는 반세트 캠핑용품 포함 텐트 등의 설치·운영” 신청 시 적정 여부에 관한 법률 질의를 받는 등 다양한 시설 형태나 조건으로 운영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입찰공고한 내용을 준수하여 입찰 및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사용수익허가 일반·특수조건에 시설설치 등의 허용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제한 행위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201\*. \*\*. \*\*. ▷차 사용자 결정을 위한 공고(4회) 시에는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25조,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야영장 관리 운영계획서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sup>15)</sup> 승인받도록 하고”(201\*. \*. \*\*. 사용수익허가하고 201\*. \*. \*\*.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승인 처리하지 않았음) 불이행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향후, ① 입찰 시 다양한 영업 형태, 사례를 검토하고 허용·제한 범위를 구체화 하여, ② 시설물 설치·개선, 행위 제한 범위에 따른 문제로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14) 변호사 3명 자문내용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수익허가를 함으로써 하자가 치유되었으며, 승인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는 허가가 유효함으로써 사후 승인되었다고 볼 수 있음)  
15) 201\*. \*\*. \*\*. 사용수익허가, 201\*. \*\*. \*\*.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한 사항인지, 사후 보고사항 인지, 사전 승인사항인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보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시설 운영상의 문제

○차 사용자 결정 시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9조 및 특수조건 제3조, 제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응대 처리하여야 하고 위생, 환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소가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으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201\*. \*\*. \*\*.부터 ○차 사용자가 야영장을 사용하면 야영장 내 불법 쓰레기 매립, 취사행위 등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 2016. \*\*. \*\*. 제\*\*회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사업소에서는 개선방안 [1안 집단 바베큐장 폐지, 2안 야영장 폐쇄, 3안 직영 운영(인천시 또는 공단 등)]을 검토하여 집단 바베큐장은 □차 사용자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이후 폐지하는 인천대공원 야영장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차 사용자가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일(201\*. \*\*. \*\*. ) 이후 무단 점유하면서 집단 바베큐장은 계속 운영되었으며<sup>16)</sup> 이후, 사업소에서는 □차 사용자 사용수익허가 시 집단 바비큐존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여<sup>17)</sup> 현재는 운영되지 않게 되었다.

향후,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화재 등 안전사고가 없이 시설을 사용·운영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5. 야영장 수익 여건 변화에 대해 (사용료 경과, 이용객 추이)

가. 이용시설 및 규모 변경

입찰공고문 등에 의하면 사용료를 받는 텐트는 야영장 면적 변경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표 1] 시설종류 및 규모 변경 (단위: 면, ㎡)

구 분	계	자가	몽골	사용면적	시설면적	비 고
○차 사용자	103	81	22	29,370	417.00	
○차 사용자	83	61	22	29,370	420.16	조성계획 면적(29,370㎡)에 부합하도록 그린B(5면) 및 그린C(15면) 폐쇄
○차 사용자	83	61	22			
○차 사용자	103	81	22	31,687	420.16	자가텐트 면수( 61 → 81) 그린A(10), 그린B(7), 그린C(15), 엘로우(35), 레드(14) 공원조성계획 변경으로 캠핑장 면적 (31,687㎡) 반영

나. 사용료 근거 규정 및 변경

(1) 당초 규정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sup>18)</sup>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 사용료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 별표 2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중

(단위: 원)

종 별	사용기준	금 액	비 고
야 영 장	1회당	10,000 ~ 20,000	
	전기사용	5,000	

이에 따라, 201\*. \*\*. \*\*. 운영관리계획에서 야영장의 사용료를 정하고 공고·고시하여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3] 사용료 계획(운영관리계획)

(단위: 원)

구 분	일반 (42㎡) (6×7)	몽골텐트(70㎡)(7×10)	비 고
야영장	15,000	20,000	조례로 정한 사항

18) 조례 제7조 (도시공원의 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시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1.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사용 2.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판매, 사진촬영 등의 사용  
3. 운동회, 집회 등을 위한 일정한 지역 및 시설의 일시 사용

16) 201\*. \*\*. \*\*. 접수민원 이송 (201\*. \*\*. \*\*. 바비큐존 이용시 연기 및 냄새가 발생하여 생활에 불편)  
17) ○차 사용자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3조 (행위제한) 제8호 야외 바비큐존을 운영하는 행위

텐 트	10,000	30,000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
매 트(1인용)		1,000	
전기사용		5,000	

#### 201\*. \*\*. \*. 인천대공원 시설 사용료 공고(제201\*-\*\*호)<sup>19)</sup>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면 적(㎡)	사 용 료	비 고
야 영 장	42( 6×7)	15,000	
	70(7×10)	20,000	

※ 기타 사항은 201\*. \*\*. \*. 공포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적용  
야영장 전기사용료 : 5,000원 (부가세 포함 금액)

#### 201\*. \*\*. \*. 인천대공원 시설 사용료 고시(제201\*-\*\*호)<sup>20)</sup>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규 격	사 용 료	비 고
텐 트	일 반	10,000	비 고정식
	몽 골	30,000	고정식
매 트	1인용	1,000	

201\*. \*\*. \*. 야영장 ○차 사용자 결정을 위한 사용수익허가 제공고(4차) 시 입찰  
유의서 제4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4조, 제5조와 201\*. \*\*. \*. 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 통보시의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판매·대여  
품목 및 가격은 사업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야영장 사용료 및 시설임대료는  
우리 시에서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료 환불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5조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 \*\*. \*. ○차 사용자 결정을 위한 사용수익허가 제공고(4차)  
입찰공고문 중 입찰참가 주의사항,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1일 기준으로 징수하는 야영장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19)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5조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공고  
20)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고시

조례에 따른 고시·공고(고시(제201\*-\*\*호), 공고(제201\*-\*\*호))에 따르도록” 하였다.

### (2) 변경 규정

이후, 사업소에서는 201\*. \*\*. \*. 타 시도 사례 비교 등을 통해 201\*. \*\*. \*.부터  
사용료를 변경하는 “시설사용료 결정 검토 보고”와 “너나들이 캠핑장 운영계획”,  
201\*. \*\*. \*. 야영장(너나들이캠핑장) 사용료 고시(안)을 확정 하는 시설사용료  
결정 검토 보고를 한 후 201\*. \*\*. \*. 사용료 변경고시를 하였다(제201\*-\*\*호)<sup>21)</sup>

[표 4] 야영장(너나들이캠핑장) 사용료 고시

#### 1. 시설사용료

시설명	구 분	면 수	규 격	가 격	선택옵션등 (별도요금)	비 고
임 대 자 가	계	103				
	캐빈텐트 (데크포함)	33	3m×4m	44,500원	▶ 냉·난방 시설 : 18,000원 ▶ 4인기준 추가시 인당2,000~ 4,000원	숙 영 지 역
	그늘막 캐빈텐트 (데크포함)	28	캐빈텐트(3m×4m) 그늘막(3m×5m)	65,000원	▶ 냉·난방 시설 : 18,000원 ▶ 4인기준 추가시 인당2,000~ 4,000원	
	몽골텐트 (데크포함)	22	5m×5m	50,000원	▶ 냉·난방 시설 : 30,000원 ▶ 입장료 인당 : 2,000~4,000원	
가	자가텐트 (데크포함)	20	3m×4m	20,000원	▶ 4인기준 추가시 인당2,000~ 4,000원	
	가족단위 침터 (노 지)	1,500㎡	4인기준(3×4m) (4인이상설치불가)	입장료(인당) 2,000~4,000원	▶ 숙박금지 (당일 08:00~20:00 이용가능)	당일 사용

※ 일일기준 시간 : 당일 11시 입실 익일 10시 퇴실  
※ 환불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6-15호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2. 입장료

만6세 이하	국가유공자·장애인, 고령자(만65세 이상), 만12세 이하	성 인	비 고
무 료	2,000원	4,000원	

사업소에서 사용료를 변경(고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는 측면  
에서 이용객 (시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영업 이익도 적정하게 유지될 수있도록 현재의 경영상태(수익, 비용 등), 운영주체,  
운영방식, 이용객 수, 사용료(사용수익허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1) 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른 수익시설 사용료 고시

그런데도, 인천대공원 야영장은 ●●캠핑장 보다 면적은 18% 넓고, 면수는 6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에서 사용료 변경 시 사용자의 연간 이용객을 반영한 수익 자료 없이 비용인 연간 임대료만을 비교하여 ●●캠핑장 수준으로 사용료를 결정하였다. 또한, 사용료 변경에 따른 객관적인 시장조사, 자료 비교·분석이 미흡하고 사용료 변경 전 대비 이익(수익 - 비용) 개선 정도를 알거나 영업 안정성을 전망(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텐트 종류별 수량”을 변경하는 사용계획 변경 승인이나 사용료 변경 고시 전에 사용자의 최대 기대 수입을 계산하여(비용 반영 없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종전과 비교함으로써 사전에 변경 필요성,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3) 201\*. \*\*. \*\*. 사용료 변경고시로 인한 수익개선 효과

#### - 1일 명목 기대수입 :

입찰공고와 당시 공고·고시된 사용료 기준으로 한 1일간 최대 기대 수입 (이하, “명목 기대수입”이라 한다)<sup>22)</sup>은 ○차 사용자는 3,061,500원이고 ◎차 사용자는 2,720,000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 \*\*. \*\*. 사용료 변경 고시로 5,188,500원으로 증가하였다.

#### - 1일 실질 기대수입

위 4- 가 “시설 설치(사업계획서 승인)”와 관련 사용자가 “사용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사용자가 입찰공고한 내용, 공고 또는 고시한 가격을 반영하되 불명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간 구성 및 판매 형태 등은 사용자의 자율을 일부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에 따른 기대수입은 사업소에서 승인한 사업 계획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고, ●차 사용자의 경우 1일 평균 4,100,500원(비수기:

3,065,000원, 성수기: 5,136,000원)으로 예상되었다.

**㉢차 사용자의 경우**는 사용자가 201\*. \*\*.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 처리하지 않았으며, 201\*. \*\*. \*\*. 사업소에서 사용료 변경 고시를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사용자가 운영 면수를 조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향후**, 사업소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사업계획서의 적정 타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 통보하거나 고시된 금액을 적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업무 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아래 [표 5] 와 같이 사용자는 201\*. \*\*. \*\*.부터 201\*. \*\*. \*\*.까지 입찰공고 및 사용수익 허가한 ㉠와 다른 ㉡와 같은 형태(운영면수)<sup>23)</sup> 및 사용료로 운영하였고, 201\*. \*\*. \*\*. 사업소에서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동절기(‘\*. \*. \*.~\*. \*. \*.’)중에는 ㉢와 같이 운영하도록 승인하였다가 현재는 201\*. \*\*. \*. ㉣<sup>24)</sup>와 같이 변경계획을 승인하였다.

그 결과, ○차 사용자의 1일 실질 기대수입은 5,188,500원(㉡사용료 변경고시) → 3,724,500원(㉢동절기) → 4,736,000원으로(㉣현재) 변경되었다.

[표 5] ㉢차 사용자

(단위: 원)

구역(운영형태)			201*. **. *. 입찰공고 201*. **. *. 사용허가			201*. **. *.사업계획 (201*. **. *.부터시용)			201*. **. *.변경고시			201*. **. *. 변경계획승인 (‘*. *. *.~*. *. *.’적용)	
			㉠			㉡			㉢			㉣	
			면수	가격	금액	면수	가격	금액	면수	가격	금액	면수	금액
		계	103		2,720,000	133		5,655,000	103		5,188,500	103	3,724,500
임대	A	캐빈텐트				38	45,000	1,710,000	33	44,500	1,468,500	41	1,824,500
	B	그늘막 캐빈텐트				33	65,000	2,145,000	28	65,000	1,820,000		
	C	몽골텐트	22	50,000	1,100,000	22	50,000	1,100,000	22	50,000	1,100,000	22	1,100,000

23) 103면 (자가 81, 임대(몽골) 22) → 103면 (자가 20, 임대 83면(캐빈 33, 그늘막 캐빈 28, 몽골 22))

24) 103면 (자가 10, 임대 93면(캐빈 38, 그늘막 캐빈 17, 몽골 (22, 16))

22) 입찰공고 기준 1일간 총기대수입/(1차 사용자: 3,061,500원[(81×(16,500원+5,000원(전기료))+22(55,000원+5,000원)])

자가	자가텐트	81	20,000	1,620,000	20	15,000 (임대료별도)	300,000	20	20,000	400,000	40	800,000
나들이존	가족쉼터				20	20,000 (그늘막)	400,000		임대료 (인당) 2000~4000 (20000)	400,000		

부가가치세, 전기료 포함

#### - 연간 실질 기대수입

사용자의 기대 수익률 (연간 사용료 대비 연간 실질 기대수입의 비율)은 ▷차 사용자는 6.2배에서 4차 사용자는 6.7배로 증가하여 다소 경영 안정화 및 수익률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야영장 운영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나친 요금 상승은 통제하는 등 공공성을 균형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표 6] 연간 실질 기대 수익률

(단위: 원)

구 분	1일 수입	연간 수입(A)	연간사용료(B)	수익률(A/B)	비 고
○차 사용자	4,100,500	1,496,682,500	242,889,260	6.2배	3년차 계약
○차 사용자	4,736,000	1,728,640,000	256,201,000	6.7배	'1*,**, 변경계획

#### 다. 이용객 및 수입 추이

201\*. \*\*, \*\*. 인천대공원 야영장업 등록관련 문서, 201\*. \*\*, \*\*. 인천대공원 야영장 운영개선 계획이용객 현황, ○차 사용자 제공 자료에 의하면 종전 대비 최근의 이용객 및 영업 매출은 감소하는 추이를 알 수 있다.

[표 7] 인천대공원 야영장 이용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11.~12.	2019.1.~ 7.
계	106,600	98,100	106,700		3,205	18,195
야영장(숙영)	성인60%, 청소년,어린이40%	66,900	77,300			
잔디바베큐장	주말85%,평일 15%	31,200	29,400			

※ 201\*. \*\*, \*\*. ~ 201\*. \*\*, \*\*. : ○차 사용자 불법 점유  
201\*. \*\*, \*\*. ~ 201\*. \*\*, \*\*. : 행정대집행, ○차 사용자 결정, 준비기간

[표 8] ○차 사용자 영업 수입

(단위: 명, 원)

기 간	입장객 수	수입금액	비 고
계	21,400	160,211,000	
201*. **,	2,020	13,300,500	나들이존 이용객 및 매점매출별도
201*. **,	1,185	7,919,000	
201*. **,	270	1,771,500	
201*. **,	550	3,657,000	
201*. **,	1,310	7,592,000	
201*. **,	2,945	21,098,500	
201*. **,	4,595	39,237,000	
201*. **,	5,505	40,734,500	
201*. **,	3,020	24,901,000	

○차 사용자/ ※ ○차 년도 (201\*. \*\*, \*\*. ~ 201\*. \*\*, \*\*.)]

#### 6.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에 대해

201\*. \*\*, \*\*. 운영관리계획에 의하면 야영장 운영은 “시민들의 편의 제고 및 세외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야영장 조성, 유지·관리를 위한 직접 투자비는 조성 당시 약 29억 3천만 원의 사업비와 기간 경과 및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등에 따른 영업 중단 후 재개장을 위한 시설 보완을 위해 7건/ 4천2백만 원과 소송, 용역(행정 대집행, 폐기물 처리 등)의 간접비가 투자되었고 향후, 시설 노후화 및 기본시설 보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사업소에서는 야영장 운영을 통한 수익이 조성비용, 유지 관리 비용 이상으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의 내구연한, 상태, 방문객 및 사용자 의견 등에 따라 단기· 장기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야영장은 불편 해소와 안전을 최우선하여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sup>25)</sup> 따라 운영하고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경우 방문객 불편이 없도록 휴장 기간에 실시하거나, 사용자 변경 시에는 다음 사용자의 재산 사용에 불이익이나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할 할 필요가 있다.

2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 7.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 가. 사용료 부과,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80조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연간사용료를 사용 전에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을 체결하여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하도록 하고 기한내 내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업소에서는 ○차 사용자가 \*차년도 4회분부터 \*차년도 사용료 (1~4회차)까지 지속적으로 체납하여 체납 독촉 등 많은 행정적 노력을 하였다.

또한, 201\*. \*. \*\*. \*차년도 사용료 분할납부 산출내역, 201\*. \*\*. \*\*. 분할납부 신청 회신 문서에 의하면 사업소에서는 사용료 체납에 대비하기 위해 회차별로 “이행(지급)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201\*. \*\*. \*\*. ○차 사용자가 \*차년도 4회차 사용료를 연체하자 보증보험사(SGI 서울 보증 인천지점)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 \*\*. \*\*. 보험금을 받았다.

사용자의 영업의 수익 환경은 (방문객이 '1\*~'1\*년의 경우 연간 약 10만 명이었으나 '1\*년도의 경우 약 3만 명('1\*. \*\*. ~ '1\*. \*\*.을 연간 환산)으로 감소) 종전에 비해 좋지 않은 추세에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캠핑 문화의 열기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사용자 입찰 공고에서 3회 공고까지 무응찰과 사용료를 2회 10%씩 체납하여 사용자가 결정된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사용자가 영업을 포기하거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대비도 필요하다.

### 나. 변상금 등 부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끝난 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그 기간에 대해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납부하게 하거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고, 불이행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소에서는 ○차 사용자가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한 이후인 201\*. \*\*. \*\*. ~201\*. \*\*. \*\*.까지 무단점유하고 사용수익허가를 계속하여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및 폐기물 처리비용 총 401,951,100원('1\*. \*\*. \*\*. 기준)을 부과하였다.

## 8. 세외수입 체납관리 현황 및 관리

### 가. 변상금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63조에 의하면 변상금과 연체료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를 위해 압류 등을 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소에서는 ○차 사용자에게 대한 변상금 중 1차로 부과한 190,016,920원 [변상금: 189,518,470원('1\*. \*\*. \*\*. ~'1\*. \*\*. \*\*.), 연체료 498,450원('1\*. \*\*. \*\*. ~ '1\*. \*\*. \*\*.)] 에 대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압류 통지 및 채권추심을 하여 2회에 걸쳐 총 2,780,010원을 추징하였으나 나머지 399,171,090원은 채권 확보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 \*\*. \*\*. 세외수입 체납처분 전산자료 일제정비 계획 등 관련 문서<sup>26)</sup>에

26) 201\*. \*\*. \*\*. 세외수입 체납처분 전산자료 일제정비 계획 (☐☐-\*\*\*\*), 201\*. \*\*. \*\*. 일제정비 추진결과 제출요청 (☐☐-\*\*\*\*) 201\*.

의하면 제1차 사용자는 201\*. \*\*. \*\*. 사업자등록<sup>27)</sup>을 폐업하고 이후 야영장 영업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 없어 카드매출채권은 201\*. \*\*. \*\*. 압류해제하였으며, 예금은 2회(201\*. \*\*. \*\*, 201\*. \*\*. \*\*. ) 채권추심 후 압류해제(자동차는 압류 유지) 및 201\*. \*\*. \*\*. 변상금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향후, 변상금 등을 채납하는 경우 적정시기에 압류, 채권추심하고 지속적으로 채권을 추적·관리할 필요가 있다.

## 나. 소송 판결금 관리

○차 사용자 결정 시의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용재산의 자진 명도 및 허가조건의 준수를 위해 공증각서 제출 또는 제소 전 화해조서를 요구할 경우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8조에서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상대방 당사자의 재산추적 및 채권보전 조치, 강제 집행 절차의 이행 및 판결금 등의 추심 등)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소에서는 201\*. \*\*. \*\*. 제소 전 화해조서가 아닌 인증서(이행각서)를 제출받았으나 이행각서에도 불구하고 □차 사용자는 201\*. \*\*. \*\*. 민사소송(손해배상)<sup>28)</sup>을 제기하면서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일(201\*. \*\*. \*\*. ) 이후 사업소로부터 사용수익 허가 만료 안내 2회, 무단점유 해제 및 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2회 등의 통보를 받고도 불응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소에서는 소송 절차에 비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소 전 화해 절차의 방법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야영장 명도를 위한 소송을 201\*. \*\*. \*\*. 제기하여 201\*. \*\*. \*\*. 확정판결<sup>29)</sup>을 받는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사업소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소송 판결금(부당이득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했으나 201\*. \*\*. \*\*.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라 현재는 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다.<sup>30)</sup>

## 9. 불법행위 관리 및 강제집행

### 가. 1차 발생(201\*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1조, 제1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시행계획(□□공원사업소 - \*\*\*\*(201\*. \*\*. \*\*. )에 의하면 사업소에서는 □차 사용자가 201\*. \*. \*\*. ○○구청장(◆◆과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201\*. \*\*. \*\*. 까지 하도록 요구받았으나 “자금 곤란, 대체 창고 설치요구 등”의 사유로 201\*. \*\*. \*\*. 까지 총 3회 약 9개월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미조치하여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를 하자 201\*. \*\*. \*\*. 자진 철거 하였다.

### 나. 2차 발생(201\*년도)

또한, 야영장 내 무단점유물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인천대공원-\*\*\*\*(201\*. \*. \*. )에 의하면 ○차 사용자는 201\*. \*. \*\*. 불법시설물을 자진철거 하였으나 사용수익허가 기간

201\*. \*\*. 1심 201\*가합 \*\*\*\*, 201\*. \*. 2심 201\*나 \*\*\*\*

피고(주식회사 A)는 원고(인천광역시)에게 건물을 인도 및 토지 29370㎡를 인도하고 201\*. \*\*. 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895,286원<야영장 및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는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기간만료로 끝난 사용수익허가상의 사용료 1년 사용료 250743440/12개월)>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0)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변상금 부과·징수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 \*. \*. 선고 201\*두\*\*\*\* 판결)”

\*\*\* 재산압류대상자 통보 및 부서이전 제출(㉠-\*\*\*\*), 201\*. \*\*. 재산압류 결과 통보 (㉡-\*\*\*\*)


27)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28) 201\*가합\*\*\*\* 손해배상(인천시: ■구의 일반야영장업 수리지연에 대한 조치 등, ■구: 수리지연행위, 허위사실 유포)

29) 200\*다\*\*\*\*(대법원 201\*. \*. \*. )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도 있으나 별도로 공유재산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료일인 201\*. \*\*. \*\*. 이후 계속 무단점유하면서<sup>31)</sup> 25차례의 원상복구 및 반환 명령에도 불응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소에서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4동)은 201\*. \*\*. \*\*. 부동산명도 단행가처분<sup>32)</sup> 결정에 따라 201\*. \*\*. \*\*. 강제집행하여 점유이전 및 폐쇄하였고 (이용객 불편 초래). 사용수익허가가 만료된 후 약 11개월 후인 201\*. \*\*. \*\*. 행정대집행하여 나머지 토지 등 행정재산의 점유이전 및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이후, 2차례의 행정대집행 보관물품 인수안내 통보(201\*. \*\*. \*\*, 201\*. \*\*. \*\*. ) 후, 보관물품  처리용역(착수: 201\*. \*\*. \*\*, 준공: 201\*. \*\*. \*\*. )을 하였으며 201\*. \*\*. \*\*, 201\*. \*\*. \*\*. 행정대집행 및 보관물품 처리 비용 납부명령 및 독촉 고지 하였다.

#### 다. 제소 전 화해 신청

□차 사용자의 무단점유로 인한 명도소송과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 및 결정 시 “토지 부착시설물”이 포함되었다라면 약 3개월의 무단 점유 (201\*. \*\*. \*\*. ~ 201\*. \*\*. \*\*. 까지) 이후 전부 강제집행 및 점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토지 부착시설물”이 포함되지 않아 토지와 부착시설물은 강제집행 할 수 없어 다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까지 약 1년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장기간 휴장 등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과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하였다.

◎차 사용자의 경우 □차 사용자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기 않도록 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부적정한 행위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르면 사용기간의 만료, 사용허가를 취소 하는 경우 사용재산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제소 전 화해 신청<sup>33)</sup> 동의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무단점유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소송의 방법으로 하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어 사용자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받아들 필요가 있으나 감사기간 중인 201\* \*\*. \*\*. 동의서를 받고 제소 전 화해 신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제소 전 화해 신청 시 “토지 부착물 현황 및 상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계획 변경 승인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업소에서는 2019. 8. 현재 야영장 외 11건의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하고 있고 2020년도 본예산에 제소 전 화해신청을 위한 7건의 예산 편성(7,000천 원)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사업소에서는 사용수익허가 한 영업이 양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장 운영이나 알기 어려운 채무로 인해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등 채권 확보가 곤란하고 무단 점유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강제집행력·실효성 있는 제소 전 화해 결정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

#### 라. ▣차 발생(201\*년도)

또한, 관련문서<sup>34)</sup>에 의하면 201\*. \*\*. \*\*. ○차 사용자가 동절기 고객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텐트 구성 변경 신청”을 하여 201\*. \*\*. \*\*. 승인하였으나 사업소에서는 201\*. \*\*. \*\*. “야영장 시설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임의 변경”하였다며 201\*. \*\*. \*\*. 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하였다.

31) 201\*. \*\*.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3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명도단행가처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건 중에서 예외적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본안소송의 승소판결 전에 먼저 명도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가처분결정”

33) 제소 전 화해 절차 (민사소송법 제385조부터 제388조까지)

34) 201\* \*\*. \*\*, ○차 사용자의 캠핑장 운영 협조(1\*. \*\*. \*\*, ~ \*. \*\*. 텐트 운영 변경), 201\*. \*\*. \*\*. 사업소 회신, 201\*. \*\*. \*\*. 너나들이캠핑장 원상복구 명령, 201\*. \*\*. \*\*. 시설 시정 관련

이에 대해, ○차 사용자는 201\*. \*\*. \*\*.까지 예약이 완료되어 시정 조치는 201\*. \*\*. \*\*. 이후 시행할 계획임을 통보받았으나 201\*. \*\*. \*\*. 201\*. \*\*. \*\*.부터 사용자가 변경하여 운영 중인 현황대로 변경계획 승인을 하였다.

**향후**, 종전의 사용계획 승인과 다른 형태의 운영이 사용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 및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영업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8조, 제13조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 10. 종합의견 (개선요구)

### 가.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해

야영장은 인천대공원 내에 조성되어 있어 이동 시간이 짧고 다른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공공시설로 신설되거나 사설 시설 대비 고급화, 다양성 등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건이며,

전체 6년의 기간 중 야영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이용에 어려움이 없었던 기간은 4년이고 나머지 2년은 무단점유와 사용자 모집과 재개장을 위한 준비 등을 위해 휴장하여 적정한 유지·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향후, 정기적인 방문객이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신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야영장 이용 불편이나 민원사항 등을 파악·개선하고, 우수 시설 벤치마킹, 전문기관·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나. 경영안정화 및 수익성 개선에 대해

야영장을 조성하여 개장한 이후 총 6년간('13. 10. 7.~'19. 10. 31.)건설에 따른 직접 조성비 및 유지·관리비는 총 3,035,014,480원이 투자되었고 사용료 및 변상금 등은 ○차 사용자에게 3년간 786,091,250원, 3차 사용자에게 1,061,172,260원의 입찰보증금, ○차 사용자에게 1년간 256,201,000원을 받아 총 1,061,172,260원의 세외수입과 채권손실(추정) 39,9171,090원이 발생되었다.

현재 기준 위 수입과 투자비용만을 고려한 손익분기점은 14년으로 앞으로 8년 후로 예상된다.

야영장을 별도의 구역에 조성하고 사용료 등을 부담하는 방문자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것으로 투자비용, 예상 수입과 장단기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소에서는 사용자 결정, 휴장 등의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되 예측 가능한 세외수입이 보장되고 운영자는 적절한 수익성이 유지되도록 입찰 및 계약조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정기적으로 사업자 수익성 분석, 영업 환경 변화 추이 파악, 캠핑 문화 트렌드 조사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다. 개선요구

따라서, 6년 간 야영장 운영 시 나타난 업무처리 소홀 또는 미흡한 부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축적된 자료와 최근의 변화 추이 및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예측을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조치할 사항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개선) ① 인천의 대표 공원 내에서 야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공원 본연의 기능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고 주변 시민의 민원, 이용객의 불편, 부당요금·고비용,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나 불신을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② 사용자가 캠핑 문화, 트렌드의 변화, 이용객 기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자율성, 수익성은 일정 수준 보장되도록 하되 허용 범위나 승인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③ 위 1-9까지의 부문별 지적사항(업무처리 미흡, 소홀하고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위 10 “개선·보완 및 검토방향”을 포함하여 운영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특히 4)항의 경우 ①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 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에 한하여 계약담당자는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2015. 6. 30.)」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제6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169조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무)제2항을 보면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1) 설계변경, 2) 공법의 변경 3) 기술적 문제의 해결 4) 기성고의 사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및 조치방안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A 조성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2018. \*\*. \*\*. (주)□□ 대표 A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8. \*\*. \*\*. (주)□□으로부터 실정보고를 받아 2018. \*\*. \*\*.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고 2018. \*\*. \*\*.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

2018. \*\*. \*\*. ~ \*\*. \*\*.까지 고사목 제거 수량 변경 외 18개 공종에(29,299 천 원 증액)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2018. \*\*. \*\*. 준공계를 제출받아 2018. \*\*. \*\*. 준공검사 후 공사 준공 처리 되었으나 공사감독일지 및 현장작업일지 확인결과 잡자리습지 전기 인입 및 판넬 설치, 휠체어 경사로 반입 및 설치만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설계변경 공종은 실정보고 승인 전에 공사를 시행하고 이후 설계변경 처리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주의) 사업시행 시 내역서 누락, 오류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공사의 실정보고 승인, 검토보고 및 설계변경 처리 후 시공하시기 바라며 직원에 대해 직무교육 등을 실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원 내 시설물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외 1개 부서

내 용

### 1. 건축물 관리 소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동법 제14조(건축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20조(가설건축물)에 의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제2항에 따라 인천대공원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 재산의 재산관리관은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이며, 동 규칙 제4조(관리책임) 제3항에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규칙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재산 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권리 확보된 내용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동 규칙 제22조(신축 등 신청)에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규정에 따라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일반재산대장, 4. 일반재산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㉔ 매점 외 2개소에 대해 건축법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건축허가 등 절차를 이행하여 건축물 대장 등재, 등기 등록 등을 하여야 하나 건축허가 및 신고절차 없이 건축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물대장 및 등기 등록하지 않아 무허가 건축물이 존치되어 있다.

## 2. 공원시설물 관리 소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시민들이 공원 이용 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제1항 2호에 따라 공원시설 그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유지 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현장 확인결과 제1 ●●데크 및 제2 ●●데크의 관리 소홀로 목구조물이 노후 되어 응급 보수한 상태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공원 내 간이 화장실 노후화로 인한 미관저해 및 악취발생으로 공원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시정) 현재 존치 중인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절차를 이행하여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에 등재하시기 바라며, ●●공원의 목구조물 보수·보강, 간이화장실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 시설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 하자검사 소홀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이하 “정기하자검사”라 한다)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이하 “하자만료검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 또는 하자검사를 위임받은 검사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공사·물품·용역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따로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2건에 대해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 실시 및 하자담보 존속 기간 만료 전에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부적정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외 3개 부서

**내 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선임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sup>1)</sup>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1.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부적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1)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sup>2)</sup>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소방시설물 4개소가 2개의 구역에 분산되어 위치하므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인으로 1명만 선임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

## 2. 자체소방훈련 및 교육 미 실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연 1회만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과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소방계획서 상에도 연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시정)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인천대공원사업소 대지경계선 바깥쪽에 위치한 ●●공원 전시관에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 상주 근무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쪽 지역을 말함.

# 인 천 광 역 시

## 주의 · 개선 요구

제 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외 4개 부서

내 용

###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 관리 소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2조 내지 제45조에 따르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파기 또는 열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6개 부서에서 190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안내판은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이외로 이용·제3자에게 제공·파기 또는 열람한 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소홀,

제3자에게 위탁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등 개인영상정보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 관리체계 개선

현재,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190대를 부서별·기능별로 분산 운영하고 있다. 또한, CCTV 설치 담당부서와 운영부서가 다르며 운영부서 내 기술직(공업, 전산 또는 통신직) 직원이 배치되지 않아 비전문직(행정9급) 직원이 운영을 하다 보니 기술적인 부분에서 CCTV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안전사고 시간대인 심야 및 새벽에 인천대공원사업소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화재, 범죄, 차량도난 및 파손 등) 또는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2014년 ㄱ공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례와 같이 인천대공원사업소 내 여기저기 분산되어 저장·관리되며 서로 다른 인력이 감시하는 영상정보들을 통합하고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보안이 향상되도록 CCTV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조치할 사항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주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매년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시고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파기·열람 시 기록 관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제3자에게 위탁한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분산되어 저장·관리되며 서로 다른 인력이 감시하고 있는 영상정보들이 통합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공원 CCTV 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주의 요구

제 목 공용차량 구입 관련 행정절차 미이행 및 차량 기록관리 등 소홀

기 관 명 인천대공원사업소

관 계 부 서 ○○○팀

내 용

### 1. 공용차량 구입 관련 행정절차(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미이행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공용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 정수배정 승인을 받고 신규 차량 구입을 추진하였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일상감사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범위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금액<sup>1)</sup> 5천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2조 내지 제5조에 따르면 시 본청, 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등은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5조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함.

그러나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2017년 공용차량(전기자동차 2대) 구입<sup>2)</sup>과 관련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요청하지 않고 차량 구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공용차량(승합차 1대) 구입<sup>3)</sup> 시에도 계약심사를 요청하지 않고 차량 구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 2. 공용차량 기록관리와 운전원 관리 소홀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에 따라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 수불부,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 등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행정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8조, 제32조에 따라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현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투인 차량관리시스템으로 차량유류 수불부,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등을 기록관리 하고 있으나 차량이력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기록관리에 소홀하였으며, 보유차량에 대해서 매년 정기 점검·정비를 이행하지 않았고 운전원에 대한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주의) 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대상업무에 대한 감사의뢰 및 심사요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 2017년 공용차량 구입 관련 산출금액(추정금액) : 84,936천원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대상사업임.

3) 2019년 공용차량 구입 관련 산출금액(추정금액) : 39,311천원 → 계약심사 대상사업임.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이력카드 작성 등 공용차량 기록관리와 보유차량에 대한 정기 점검·정비 이행 지도 등 운전원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